

경영난 영세업체 '아우성'...점심 공백에 민원인 '원성'

7월부터 달라진 노동·행정·보건 정책에 곳곳 혼란

주 52시간제 근무 5~49인 사업장 '현장과 맞지 않다' 노사 모두 불만 공무원 점심 휴무 불꺼진 민원실서 1시까지 기다리고 발길 돌리기도 달라진 거리두기 8인모임 백신접종자 포함 여부·실외 노마스크 혼선

7월부터 달라진 노동·행정·보건 정책 등으로 곳곳에서 혼선과 불만, 혼란이 잇따랐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현장에서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점심 시간 휴무제가 시행된 5개 구청 민원실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바뀌었지만 마스크 착용, 모임 인원 등을 놓고 명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 도입= 1일부터 광주·전남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노동계, 사측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1일부터 새롭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광주 1만 3798곳, 전남 2만 946곳 등으로 3만4744곳에 달한다. 특히 5인 이상~9인 이하 사업장이 1만9504곳에 이른다.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6.13%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업자 모두 '현장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 시간이 줄면서 인력 충원이 시급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 노동 강도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은 줄어드는 기형적 근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 한 레일부품 제조업체 직원 A씨는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사측이 주·야간 2교대 근무체제로 바꿨다"면서 "주말량이 늘어도 잔업을 할 수 없어 수당은 줄어들었는데 신규 인력은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바꾸면서 노동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토로했다. 사용자측 불만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뜰이나 매출·수익이 줄었는데 52시간 의무적으로 인한 추가 매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겹쳐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태는 최악인데,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인력까지 채용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상 사업장이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장 점심시간에 민원실 찾았다가 발길 돌린 시민들=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점심 휴무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도 광주지역 5개 구청에서 빚어졌다. 이날 광주 5개 구청은 정오가 되자 민원실 문을 끄고 자리를 비웠다.

광주시 5개 구청은 대신 152대(동구 18대, 서구 30대, 남구 25대, 북구 50대, 광산구 29)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해 불편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점심휴무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찾았던 일부 민원인들은 무인 발급기로 처리가 안되는 서류도 있어 점심 시간이 끝나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북구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1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았다가 당황스러웠다. 보행 보조기를 끌고 일곡동에서 한시간 걸려 왔다는 B(81)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왔다가 낯선 무인발급기 앞에서 난감해했다. 공공일자리 요원

의 도움으로 간신히 떼고 돌아갔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속도가 느리고 지문인식 등에 예러가 생기면서 민원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보였다.

무인발급기로도 뚫 수 없는 서류를 발급하려는 시민들은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현재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입세대열람 등은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기 위한 계좌번호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점심시간 틈을 내 구청을 찾았다는 민원인도 불이 꺼진 민원 창구를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거리두기도 혼선=기준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완화됐지만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일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단계로 전환, 시행했다.

새로운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첫 2주간(1~14일)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 8명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과태료 등을 물지 않는지 몰라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자로 2주를 넘긴 경우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턱대고 허용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괜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구 용봉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D씨는 "출입명부 작성 뿐 아니라 백신접종이력까지 요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돌과 감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백신 1차 접종자 및 2차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발표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완화한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가 시행된 1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한 어르신이 무인발급기로 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녹조에 악취 민원 잦은 풍암호수 어찌나

광주 서구 수질 개선비용 부담에 마땅한 해결책 못찾아 골머리

광주시 서구가 풍암·금호지역 주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인 풍암호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극심한 녹조 현상에 악취로 민원이 폭주하면서 호수 수질개선 테스트포스탐까지 만들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광주시 서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45만 t 규모의 풍암호수에 휴을 채워넣어 담수량을 12만 5000t 규모로 줄이는 수질 개선 방안을 보류키로 했다. 서구는 호수 담수량을 줄여 4~6m 수위를 2m로 낮추고 남구정 건물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와

염주수영장에서 하루 평균 250 t의 물을 끌어들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흉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장에서 제방과 물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전기료(한달 평균 2000만원)만 내면 된다. 서구는 애초 이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남구와 염주수영장에서 매일 공급할 수량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데다, 풍암호수 원형 훼손에 따른 비판도 제기되면서 슬며시 거둬들였다. 구의 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의 제안도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민간공원 시행자는 서구에 하루 평균 1만 t의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되면 현재 4~6급 수 수준의 풍암호수 수질을 3급수로 유지될 것으로 시행자측은 예상했었다.

문제는 유지·관리비. 서구는 수질정화시설 유지비, 인건비를 포함하면 연간 최소 10억 원을 감당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서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히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풍암호수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지, 현실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선택할 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료법 위반·사기'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특경가법상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위를 취직시켜 병원 운영 전

반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재단명에 최씨의 이름 한 글자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